오늘 더 민주 탈당 DJ마지막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 인터뷰

"호남민심과 함께 야권통합 최선"

DJ 창당 했는데… 탈당 눈물나

분열은 필패 답은 통합 뿐

文·安 서로 비난해선 안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21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고, 호남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키워온 당을 떠나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로, 타고난 강골로 알려진 박 전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 국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겹치면서 지난 연말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분열은 필패며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수십 차례 설득하고 호소했지만 당내 기득권의 벽에 막혔고 결국 야권 분열이 현실화 됐다"며 "이제 내게 주어진 역할은 다시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의 통합을 위한 잠시의 탈당'이라지만 그의 결단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의 지형 변화는 물론 야권 재편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그는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과 결집으로 차기 대선에서 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결국 탈당에 나서게 됐다. 심경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창당한 정당을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이 탈당하는 것은 참으로 눈물나는 현실이다. 또 호남민이 수십 년 동안 소외와 박해를 받으며 피와 눈물로 키워온 정당을 떠나려니 수많은 회한이 가슴을 때린다. 다 나의 잘못이다.

-어떤 점이 잘못이라는 것인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대표가 됐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됐겠느냐는 자책감이 든다. 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회한도 있다.

-탈당 후 무소속 입장은 변화가 없나.

▲그렇다. 무소속으로 남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호남 민심과 함께 하며 야권 통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과 탈당은 이율배반적 아닌가.

▲정당 밖에서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느 한 편에 서서 통합을 주장한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통합을 위해 잠시 탈당한 것이다.

-호남의 현실을 진단하면.

▲호남 민심이 야권 재편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참담하다. 어느 정당도 호남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 민심을 숙주삼아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5·18 민주묘역을 찾고 양동시장에 가서 호남 구애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호남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 호남 민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전략적 선택에 나서야 한다.

-야권 분열 정국에 대한 입장은.

▲분열은 필패다. 답은 통합이다. 이는 호남 민심의 명령이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을 보면 총선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안 된다면 총선 이후라도 통합에 나서야 한다.

-호남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문재인 정당은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안철수 정당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당분간 호남 민심은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다. 설 연휴가 지나며 정권 창출을 위해 헌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지지가 결집될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현실을 평가한다면.

▲내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 문재인도 안철수도 서로 비난하면 안 된다.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서로 비난하면 공멸이다.

-야권 통합의 그림은.

▲일단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신당 그룹의 소통합을 이룬 뒤,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중통합에 나서야 한다. 이어 더민주와의 대통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무서운 사람이다. 전두환, 노태우, 한화갑,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까지 왔다. 비례대표 4선을 지냈다. 성공 여부는 일단 두고 볼 문제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입장은.

▲호남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호남 민심의 결집이 필요하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만에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결집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묻지마' 지지보다는 전략적 선택과 결집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 연정의 길도 모색해야 한다.

-연정이라면.

▲대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이 결집해야 한다. 승리의 길을 열어가면서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DJP 연합을 생각해야 한다. 지역적 연대를 넘어 차기 대선에서 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실리도 택하고 명분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호남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탈당으로 심려를 끼쳐 들 낯이 없다. 하지만 야권 분열 정국에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이다. 쉬운 길도 있었지만 통합을 위해 무소속의 길을 택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호남과 야권 통합,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바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롯데쇼핑 월드컵점 불법 전대 '빅딜·후원금 제공설' 의혹에

광주시, 뒤늦게 강경대응 '진땀'

"특정매장 전환도 일시 보류하라" 요구

시민·사회단체 비판 시정불신도 부담

광주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늑장대처,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자 진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의혹을 자초한 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고 '빅딜·후원금 제공설' 등 각종 억측까지 나돌자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등 뒷북 수습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 임형택 대변인은 21일 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위법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해 시민에게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빅딜설과 후원금 관련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불법 전대매장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롯데측이 전대매장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는 특정매장 전환 작업도 일시 보류하라고 요구했다"밝혔다.

이날 대변인까지 이례적으로 담당 부서를 제치고 진화에 나선 것은 애초 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에 부당이익금 환수, 사법당국 고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과 달리 원상회복 조치 및 개선을 요구(시정명령)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심지어 '수십억원 후원금설'까지도 나돌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광주경실련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의 롯데쇼핑 측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바란다"며 "시가 지금이라도 롯데쇼핑과 대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고발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롯데 측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에서 승인한 면적(9289㎡)을 3901㎡ 초과한 1만3190㎡를 전대,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바 있다.

광주월드컵점이 사용 중인 부지면적은 5만7600여㎡며 시에 내는 대부료는 연간 45억80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전대 수익이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고민 깊어지는 광주시

시민단체 연석회의서 "사업 재검토" 주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을 놓고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4년 "시민 뜻에 따라 2호선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21일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4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NGO센터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3차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취합했다. 이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심도 원안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치21과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7개 단체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윤 시장 임기 안에 2호선을 착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건설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7개 단체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안(저심도)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 시 재정에 부담이 크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시로서는 이를 수용하면 도시철도 건설 여부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후퇴하게 된다. 이미 윤 시장이 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시가 시민단체토론회를 지켜본 뒤 2호선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반대입장'이 도출됨으로써 퇴로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시의 선택폭이 더 좁은 것은 광주시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고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영장서 한시간마다 쉬어라"… 불합리 규제 개선

국무총리실, 규제 개선 사례 발표

게스트하우스 인접 도로 기준 8m→4m로 완화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수영장에서는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 지금까지는 인접 도로의 폭이 8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m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년 하반기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기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영장은 침전물이 있는지, 또 사고가 났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둬야 한다. 총리실은 이 같은 규칙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호텔이나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회원제 수영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쉬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입지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일반주거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경우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게스트하우스가 입지 요건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도로폭 요건을 '8m 이상'에서 '4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40%를 넘으면 산지 전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경사도의 안전성 문제 등이 검토됐다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야간에 저수지에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을 운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대책을 확보하는 경우 야간 운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중·대형승합차의 경우 5년까지는 매년, 5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준 연도를 8년으로 완화했다. 이 경우 연간 46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